

「충남 노인인적자원 개발의 방향과 과제」 심포지엄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센터장 백남훈)와 금강대학교(총장 김유혁)은 5월26일 오후2시 논산시 상월면 금강대학교 사이버강의실에서 「충남 노인인적자원개발의 방향과 과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지역노인, 충남지역 해당공무원,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표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의 토론이 있었다.

이날 기조발제에는 고수현 학부장(금강대 사회학부)이 '충남노인의 인적자원개발 전략'에 대해, 문진수 부장(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이 '충남노인의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이원식 교수(금강대 사회학부)이 '충남노인의 일자리사업 실태와 활성화 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논문 발표가 있었다.

또 이날 지정토론에는 강병연 강사(금강대 사회학부)와 김혜경 교수(나사렛대)와 류진상기자(서울신문)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한편 충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앞으로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충남교육청,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상공회의소, NGO, 충남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위 기관별로 이루어지던 인적자원개발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충남노인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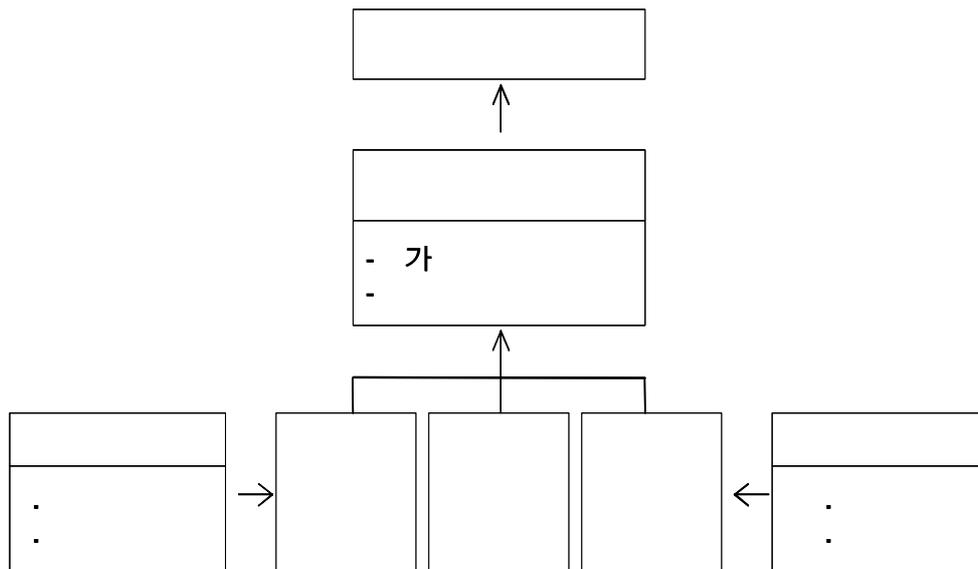
고수현

(금강대학교 사회과학부 학부장)

1. 요약

1)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 접근

우선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한 각 부문별 방안 제시에 앞서 본 발제에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한 활성화방안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근본적으로는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이 개선되도록 하는 기본모형을 재정리하면 (그림 IV-1)에서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그림 IV-1) 노인인적자원개발 개선방안 모형

주) 노년사회복지이론에는 노년학과 사회복지학이 중첩되는 이론으로 구성되며, 노인복지학으로 통칭됨.

2) 노인인적자원개발의 정책과제

(1) 노인 평생교육부문

노인 평생교육부문은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인프라에 해

당한다.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처음으로 부산, 광주, 충북 3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추진(2002.10~2003.9)하였지만 노인 평생교육부문은 간과된 측면이 많다. 이는 그간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프라가 미약하였던 관계로 그 정책을 추진할 조직과 인력체계에서도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데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처럼 노인인적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는 노인 평생교육방안으로는 제도적 정책모델과 잔여적 정책모델로 구분하여 대안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의 제도적 모델로는 고령자 직업교육프로그램, 고령자 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준·고령자 직업상담프로그램개발, 준·고령자 평생교육전문기관 설립운영 등의 대안을 제시한 후 지역학습관과 국·공립대학의 평생교육강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잔여적으로 접근 할 수 있는 평생교육모델로는 기업 및 사립대학의 평생교육지원, 준·고령자직업상담지원, 직장 및 직업적응 프로그램지원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는 평생교육을 통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시도하였다.

(2) 노인 취업촉진부문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은 현재 정부의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독자성이나 전문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의 성격에 따라 통합·전문화가 요구된다. 즉 노인일자리창출은 크게 취업부문과 사회참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부문으로 재편성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취업촉진 활성화를 방안으로는 제도적 모델로서 직업재훈련 및 재교육, 고령자 적합직종 개발 및 지도, 고령자 적합직종 기업의 고용의무화와 육성, 퇴직공무원·공사직원의 재고용, 지역별 노인공동작업장과 고령자사업단 운영, 고령자 고용전문기관 설립 운영 등의 기존의 일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잔여적 모델로는 기업정년퇴직직원의 재고용지원, 임금피크제와 점진적 퇴직제 지원, 노인에 맞는 근로환경조성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3) 노인 자원봉사부문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노인들이 아닌 중산층 이상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는 사회봉사 내지는 자원봉사부문이 있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영역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실비나 교통비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거나 간여적으로는 행정적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

노인 자원봉사활성화의 제도적 모델로서 공공복리형 자원봉사지원, 시설복지형 자원봉사지원, 재가복지형 자원봉사, 전통문화교육형, 전통문화계승형 자원봉사지원, 고학력자 및 교육전문직봉사회 운영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간여적인 모델로서의 노인자원봉사활성화 방안으로서도 골목길 지킴이형 자원봉사지원, 가정의례지도형 자원봉사지원, 농촌 일손돕기형 자원봉사지원 등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2. 제언

1) 충청·대전지역중심의 노인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1) 가칭 충청·대전지역노인 인적개발원 설립

지역의 노인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단계는 노인인적자원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배분·활용할 학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인인적자원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본적인 단계이다.

현행 교육체계를 보면 아동시기에서부터 대학생 단계의 성인초기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완비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시설은 그 인프라가 극히 미약하다.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적 구속만 갖춘 정도 일 뿐 노인이나 준·고령자들을 전문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는 고령화사회대책차원에서 별도의 전문성 있는 기구와 인력을 조직화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타의 정책에서처럼 각 시·도별로 1개소씩의 일률적인 설립은 바람직

한 방법이 되질 못한다. 마치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전국에 많은 대학을 인가를 하고 설립케 하여 오늘날 학령인구감소로 통폐합의 단계에 있는 만큼 대전·충청권을 1개 권역으로 하여 가칭 ‘충청·대전(지역)노인인적개발원’을 설립하는 제언을 한다.

(2) 대도시형·중소도시형·농촌형 학습모델 구축

학습모델(Learning Model)은 학습지역(Learning Region) 조성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이는 학문적으로는 학습경제론(Learning Economy)에 토대로 하는 것으로 평생교육을 교실단위에서 벗어나 지역(도시·농촌)단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이 많거나 교육열이 높은 도시를 ‘교육도시(Educating Cities)’라고 칭하고 있지만 이제는 고령화사회인만큼 ‘학습도시(Learning Cities)⁷⁾가 되도록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학습도시는 대도시형·중소도시형, 농촌(도시)형으로 구분하여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대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상관없이 학습과정을 설치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교실위주의 학습환경에 맞는 것이며 활동력이 있는 청년층에 맞춘 것이라면 노인은 신체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지므로 해당 거주지역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거주하는 지역환경이 농촌인가 혹은 도시인가를 비롯한 기존의 인프라를 고려한 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충남지역중심의 노인인적자원 활용체제 구축

(1) 가칭 충남지역 노인인적자원활용센터 설립

첫 번째의 제언이 노인인적자원개발의 기초단계로서 교육부문의 인프라의 필요성에 착안한 것이라면 노인인적자원 활용체제 구축은 교육된 노인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수행에 요구되는 인프라를 말한다.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의 인적자원이 사회발전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기존의 노인복지차원에서 단편적으로 설치된 노인취업지원센터, 노

⁷⁾ 학습도시의 시초는 1979년에 일본의 가케가와(Kakegawa)시에서 ‘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유럽사회로 확산되고 있는 모델이다.

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클럽), 고령자인재은행 등의 인프라로서는 노인인적자원개발이라는 경제학적인 이념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부처에서도 부처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추도록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현재도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부처사업이 중첩되지 않도록 협의는 거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에서 그 정책이 실천되는 과정에서는 혼용되거나 개별적으로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차원에서 비효율성을 제기하고 통합운영을 통하여 활성화가 요구된다. 가칭 '충남(지역) 노인인적자원활용센터'를 설립하여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혁신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언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시·도별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2) 취업부문과 자원봉사부문의 2원화 체제 구축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및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노인인적자원개발체제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은 법제나 정책에 근거해야 하는 한계성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교육법, 노동부는 고령자고용촉진법,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프로그램에만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심지어 정치권에서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슬로건을 내놓게 되고 각 부처는 그 일자리의 성격이 취업부문에 속하는지 자원봉사부문에 속하는지의 구분도 명확히 되질 않는 프로그램을 양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당장 불만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선언적 전시행정용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일단 지역별로 노인인적자원활용센터가 구축된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자체의 성격을 취업부문과 자원봉사부문으로 2원화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취업형 일자리에선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거나 부족분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지급으로 채우고 자원봉사형 일자리에선 적절한 실비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활성화가 가능하다.

3) 노인인적자원 활용의 시민의식 개선

(1) 노인인적자원 활용 주체의 의식 개선

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은 노인인적자원에 대한 교육과 배분·활용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부적인 수행과정 이외에도 대국민 홍보정책이 도시에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산업화과정에서 청·장년층의 실업문제도 제대로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걱정해야 하는 압축적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노인인적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사용주체(기업·사회단체)가 노인의 근로능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현재는 상관이 없지만 잠재적으로 노인산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노인인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이 사고하는 인식체계는 인간현상이나 사회현상을 통해서도 재정립될 수도 있지만 국가나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언론 등의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함으로써도 변화될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에서는 노인층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담층으로만 작용하거나 사회복지의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전국민적인 인식체계 변화를 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주도하여야 함을 제언한다.

(2) 노인과 젊은 세대의 의식 개선

노인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정책의 주체는 정부나 기업·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을 포함한 개인의 책임성도 있다. 즉 노인인적자원개발의 주도적인 역할은 어느 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3자간의 공통적인 기능에서 창출될 수 있다는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정작 노인의 적극적 태도가 구비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책수행의 효과성이 떨어져 목적달성이 어렵게 된다.

아울러 노인인적자원개발정책은 그 초기 단계에서는 세대간의 갈등과 충돌현상이 예견된다. 당장 일자리를 나누어야 하고(Job Sharing), 임금체계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한정된 노동시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적으로 노인층에게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준다면 양자간에는 경쟁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갈등은 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본적 맥락에서는 해결해야 할 부문이

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노인인적자원개발 전략이 고령사회에 다가서고 있는 충남지역의 미래사회에 대응한 성장 동력이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초발제에 갈음하고자 한다.

충남노인의 평생교육실태와 활성화 전략

문진수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사무국장)

1. 충남 노인평생교육의 문제점

1) 노인평생교육 정책 미비

노인평생교육을 보건복지부(충청남도)는 복지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충청남도 교육청)는 교육사업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여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관련된 법에서도 개념이 상이하여 체계적인 노인평생교육정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의 노인평생교육도 정책추진체계의 미비로 인한 비효율성, 비연계성, 비전문성이 심화되어 있다.

2) 노인평생교육 예산 취약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의 노인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일자리 제공, 자원봉사, 노인여가선용확대 및 노인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노인평생교육에는 노인정보화교육과 금빛평생교육봉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에 일부분이 있을 뿐이다.

3) 교육시스템의 취약

노인평생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시설과 노인교육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노인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고 단순 여가오락 프로그램 중심의 노인교육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과 지원을 전담하는 행정기구의 부재로 인하여 도청, 도교육청, 충청체신청, 대학평생교육원 등 각 기관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평생교육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노인평생교육 여건

평생교육에 대한 노인들의 참여 욕구에 비하여 실제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충남 지역 평생교육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충남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6.7%만이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구체적을 알고 있고, 59.6%가 평생교육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85.9%가 평생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노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노인평생교육기관의 부족도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2. 충남 노인교육의 활성화 전략

1)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 구축

노인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의 일부분인 동시에 노인복지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법, 평생교육법 등 노인과 관련된 법의 정비와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이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과 노인교육지원사업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연계할 수 있는 제구성이 필요하다.

지역수준에서 살펴보면 평생교육은 충남교육청에서 노인복지사업은 충남도청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노인과 관련된 서로간의 정책적인 연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 협의회 구

성이 필요하며, 그 협의회는 기존의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를 <표 V-1>과 같이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며,⁸⁾ 더불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평생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의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노인평생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남교육청은 노인평생교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국에 가칭 '평생교육과'를 두고 평생교육과에 가칭 '평생교육정책담당, 노인평생교육담당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참조

<표 V-1>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평생교육협의회 개편(안)

구분	현 행	개 편 (안)
명칭	충청남도교육감소속평생교육협의회	충청남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	<p>※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교육감 ○ 부위원장(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국장 - 공무원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12인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관리국장 - 평생교육체육과장 - 도지사 추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1명 -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충청남도부교육감 ○ 부위원장(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 복지환경국장 - 위원중에서 호선 ○ 위원(12인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도청 복지정책과장 -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장 -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노인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 관련사회단체의 장 및 관계행정 기관소속의 공무원
회의	<p>○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p>○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한 노인평생교육에 대한 행·재정지원체계 구축은 (그림 V-1)과 같은 모형으로서 도단위에서는 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도청, 도교육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군지역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시·군청 및 지역교육청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노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과 지원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그림 V-1) 노인평생교육 행·재정지원체계도

2) 유희 및 노인복지여가시설 활용

부족한 노인전담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부족한 시설을 대신하여 유희시설이나 노인복지여가시설을 활용하여 노인평생교육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1) 학교시설을 활용한 노인평생교육

고령 사회와 아울러 저출산률(2002년 현재1.17명)은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유희 학교시설이 늘어날 전망이다. 즉, 그 지역의 학교시설 유희화 비율은 해당 지역의 고령화 비율과 비례하므로 학교시설의 전용 또는 활용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특히 교육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일수록 학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잠재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별로 <표 V-1>과 같이 중점 노인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2> 학교별 중점 노인교육 프로그램

학교별	대상	교육내용	방법	지역단위
초·중학교	저학력노인	성인기초	문화교육기관과 연계	생활권
	일반 노인	여가, 취미교육	일반 노인대학	
실업고	취업희망노인	직업교육	주문식 교육, 산학협력 도모	지역 권역

(2) 노인복지여가시설을 활용한 노인평생교육

현재 노인복지여가시설들이 대부분 공간만 마련되어 있을 뿐, 담당 인력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의 미흡 등으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적으로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학습자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에 비례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비율이 저조한 원인 중에 하나인 노인평생교육기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여가시설을 이용한 노인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즉,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보건소와 금빛평생교육봉사단 등을 활용하여 재정적·지역적으로 소외된 경로당 등에 강사를 순회 파견 운영하는 무료 풀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충남에는 19개의 평생학습관과 4,961개의 경로당을 비롯한 5,012개소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있다.

3) 명예학생제도의 확산

명예학생제도는 대학에서 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학습하는 청강생제도의 일종이며, 소정의 교육기간에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명예졸업생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명예학생제도의 취지는 일반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노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습자에게는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에는 필요한 노인전문인력을 배양할 수 있는 명예학생제도를 모든 대학으로 확산시켜 운영하는 것이다.

4) 노인평생교육 분위기 확산

현재 충남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은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노인학습자들의 학습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1) 지역 평생학습축제 참여

2001년 제1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천안에서 개최하였고, 그 이후 홍성, 공주, 논산에서 충남지역평생학습축제를 순회 개최하면서 평생학습문화를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에 보령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이 평생학습축제를 통하여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고,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민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며,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평생학습축제에 노인들에게도 즐겁고 흥겨운 한마당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미하여 노인들의 평생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평생학습 참여도를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인학습동아리 발표회(실버댄스스포츠, 실버합창 등),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연회(노인건강강좌 등), 사이버 경진대회(실버 인터넷 경진대회 등), 평생학습 결과물 전시회 등이다.

(2) '배워서 남주기'운동 전개

노인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 부가하여 평생교육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배워서 남주기'운동을 전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노인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충남교육청(충남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금빛평생교육 봉사단, 충남도청에 관리 운영하고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충청제신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노인정보화교육강사 그리고 기타 평생교육프로그램강사(문해교육, 한자교육, 예절교육 등)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충남노인의 자원봉사실태와 활성화 전략

박 종 팔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강사)

1. 노인 자원봉사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

1) 노인 자원봉사의 참여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등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관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관련단체가 산재 되어 자원봉사자의 수나 비율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설사 통계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그 주된 이유는 정부의 지원체계 미비와 예산지원의 미흡, 노인들의 삶의 지혜와 경륜 등에 대한 경시풍조가 만연, 노인들의 권위주의적 특성, 봉사단체의 관리 미숙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대부분 TV나 라디오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극히 미흡하다. 변선희(1998)의 논문에서는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율이 4.3%이며, 조사대상자의 47.8%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지 않고, 16.0%만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는 노인들도 16.0%로 자원 봉사자의 참여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조사대상 노인의 0.4%만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건강(34.2%), 노래와 춤(20.5%)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전체 노인의 약 37%가 자원봉사를 할 의사가 있거나 적어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로 나타났다(Hrubetz, 1992). 이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에 있어서 노인들이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로는 대한노인회, 한국 노년자원봉사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노인복지회, 한국노인의 전화,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대한노인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한국노년자원봉사회 그리고 충청남도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노인회의 활동이다. 대한노인회는 70년 4월 19일 문화공보부(현재 문화관광부)의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주요사업 목적은 노인여가시설운영, 노인취업알선센터운영, 경로효친사상 선양운동,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다. 약 160만명 노인봉사자들이 교통봉사, 방범순찰, 청소년 지도, 자연보호 캠페인, 환경정화를 위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대한노인회, 2004) 그리고 지방조직은 시·도 단위연합회 16개소, 시·군·구 단위지회 242개소, 리·동 단위분회 1927개소 있다. 회원총수는 약 210만명(노인총수 약 430만명)이다. 여기서 회원총수는 210만 명인데 그 중 160만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봉사활동이 중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자원봉사활동은 중앙회 및 정부의 지침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동적으로 또는 선전이나 홍보용으로 실시되고 있는 면이 강하며,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한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과 지회 또는 노인정 회장의 능력에 따라 노인봉사활동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가옥, 1996).

둘째,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활동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2000년 창립총회를 가졌으며, 주요사업목표는 지역 센터 간 정부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활동이다. 60대 이상 노인 약 17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 250개 센터에 약 199만 3천명의 회원이 있다(한국노인자원봉사센터협의회, 2005).

셋째, 한국노년자원봉사회 활동이다. 한국노년자원봉사회는 1997년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중 약 50%인 5000여명은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한국노년자원봉사회, 2005).

넷째, 충청남도 노인자원봉사 활동이다. 충청남도의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각 시·군청 단위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재가노인사업의 일환으로 무급 및 유급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고 있다. 치매·중풍·와상노인 등 허약한 노인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실시된 가정도우미(유급봉사원) 서비스는 충청남도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는 현재 342명(유급 18명, 무급 324명)의 가정도우미가 노인은 물론 장애인을 위하여 무상 또는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충남도청, 2005). 충청남도는 또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깨끗하고 살기 좋은 충청남도를 만든다는 취지 하에서 노인들에게 교통봉사, 환경감시, 자율방법, 방범순찰, 청소년 지도, 자연보호 캠페인, 공원관리, 골목청소 등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충청남도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인력의 활용이나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하기 위한 여가활동이나 문화 복지 차원이 있는 반면 노인들에게 적은 액수이지만 봉사활동의 대가로 생계비나 용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취업 프로그램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

2) 노인 자원봉사의 문제점

노인자원봉사활동은 노인 자신의 자아성취 활동이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에 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은 소극적이고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노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희생자'로 보거나, 봉사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없는 경우이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리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이 제공하는 보람, 가치, 흥미, 자기실현, 사회적·물질적 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질 기회가 없었거나, 일방적으로 봉사자들의 자기희생적인 모습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노후의 여가를 재미있고 보람 있게 보내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잠재적 봉사자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이 흥미와는 무관한 사회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면서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경제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우리 노인들의 대다수는 경제적인 자립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셋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무관심으로 가족의 이기주의적 성향, 은둔형의 퍼스널리티, 유급직종에 대한 집착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봉사활동 자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이다. 즉 노인들은 봉사활동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자신가족의 일만이 중요하고 남을 위한 일에는 인식한 가족 이기주의적 성향은 당연히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또한 자신만의 생활공간에서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줄여 나감으로서 사회적 참여를 기피하는 은둔형의 퍼스널리티도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따른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그 일에 몰두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봉사활동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이금룡, 1999).

넷째,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노인들이 자신의 친구나 친지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노인학교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 등의 권유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는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가 아직 비공식적인 통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봉사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활동을 할 경우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방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그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봉사활동에 접근하지 못하는 원인은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봉사활동에 노출될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단지 '알지 못해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금룡, 1999).

여섯째, 사회적 지원체계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이다.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프로그램에 노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자원봉사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인정, 상해보험제도, 자기시간 정립제 등이 극히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데 우선 필요한 것은 노인의식의 개혁이다. 가용한 자원이 부족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개인적 관심사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영역만을 지키려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 노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그들의 지역사회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세상과 연결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웃과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가치체계를 점검하게 되며 세상은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인간의 삶은 조화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처한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노인이 갖고 있는 시간, 경험, 경륜, 지식, 지혜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귀한 자원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여가시간을 개인적 취미나 오락으로 보내는 경향이 높다. 노인회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노인단체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향은 아직 낮은 편이다. 봉사활동이라고 해봐야 교통정리나 거리청소, 또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위세도가 낮은 활동에 기력이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도다.

이제는 좀 더 사회적 의미가 있는 활동에, 건강과 지식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는 노인들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봉사활동을 계획해서 참여해야 하겠다. 자원봉사를 통한 헌신과 나눔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장수하는 삶을 보상으로 준다. 자원봉사는 때로 직업이 줄 수 없었던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며, 생산적이고 풍부한 인간관계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이제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달린' 노인에서 '열린' 노인으로, '받는' 노인에서 '주는' 노인으로 변화해야 하겠다.

우리나라 같이 민간 모금의 실적이 저조하며 정부의 노인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본다. 자원봉사자들이 무보수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자원봉사를 위한 조직의 운영비, 인건비, 연구비 등의 소요 경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 같이 “자원봉사 활동 지원법” 만들어 노인자원봉사조직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인력활용 및 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관련 법률 등을 통하여 노인자원봉사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인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로는 노인자원봉사자 상해보험제도 도입, 노인자원봉사자의 포상, 봉사은행 저축제도, 봉사자 정기점검, 노인자원봉사 시범실시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노인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봉사활동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할 때, 노인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제도의 실시는 중요한 일이다.

둘째, 노인자원봉사자 중에서 모범이 될 만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사람들을 선정

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연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노인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패나 선물을 주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셋째, 노인들의 자원봉사 실적을 통장에 축적하도록 하고, 후에 노인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건강한 노인들에게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저축 심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충남노인의 일자리사업실태와 활성화 전략

이 원 식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충남 일자리창출사업의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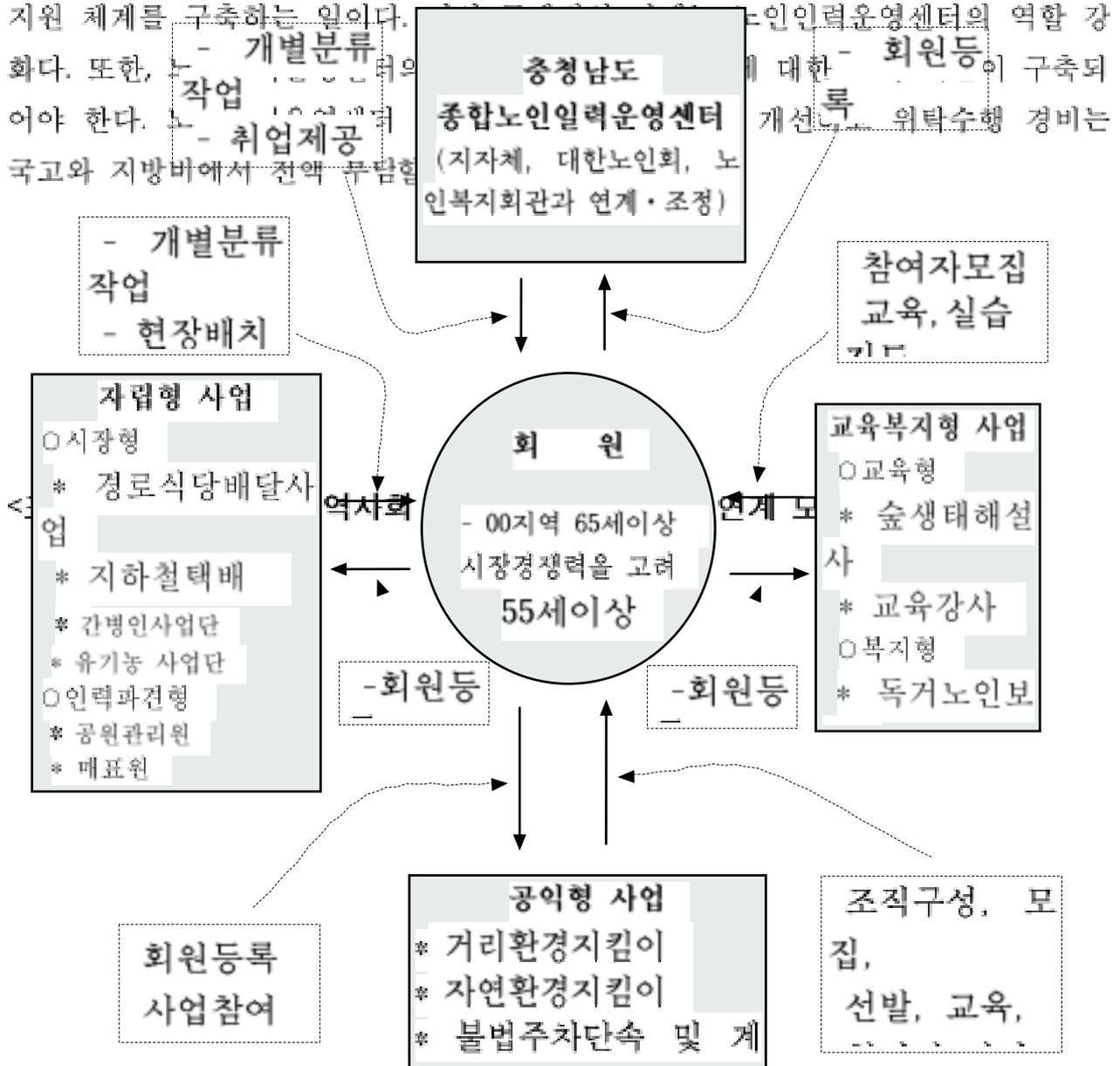
1) 노인일자리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적 서비스 체계 구축의 주요과제는 기초 단위에서의 서비스 연계 체계의 구축과 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사례관리체계의 마련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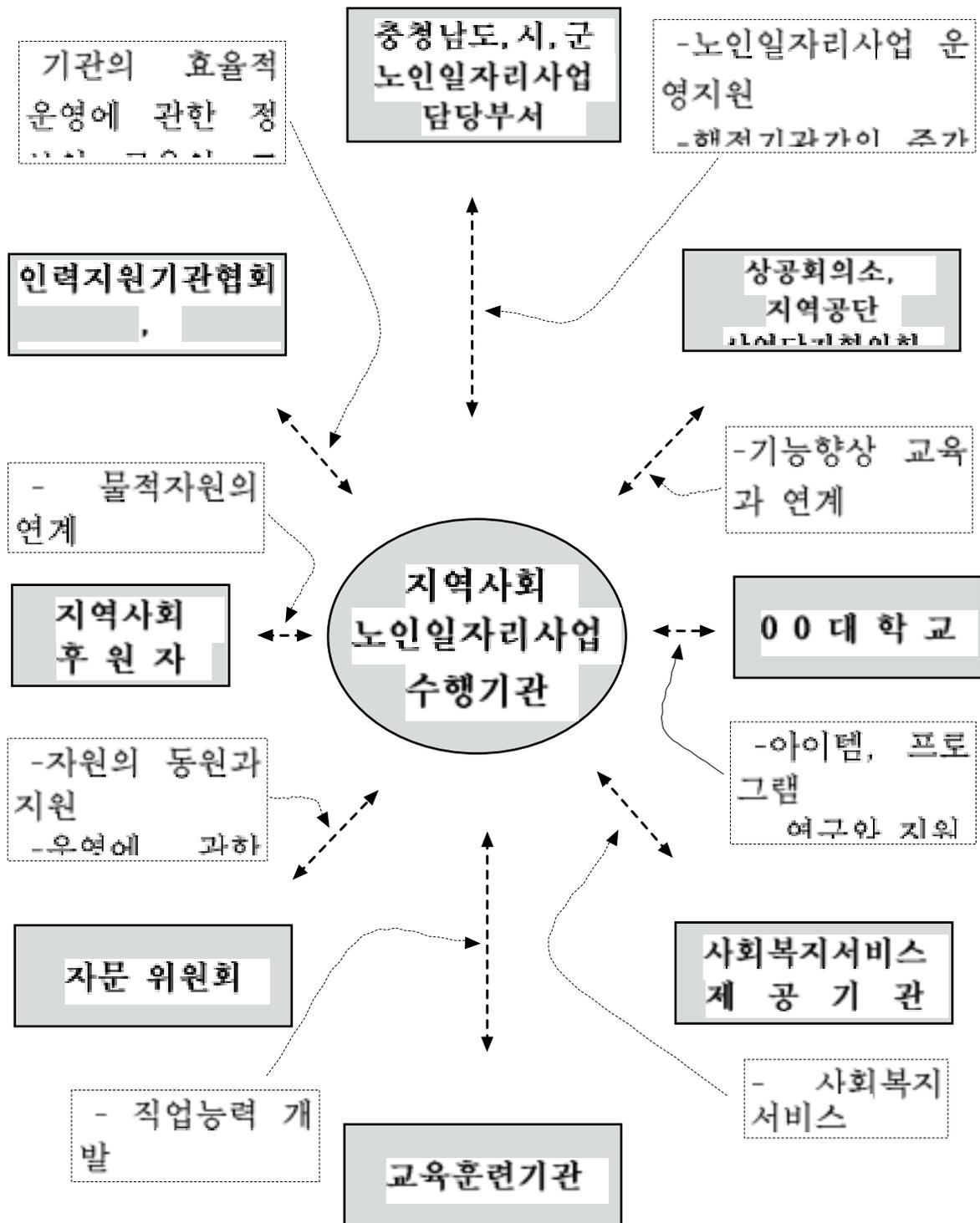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조직(사회복지사무소 혹은 사회복지과)을 중심으로 민간의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기관은 물론이고 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포함한 지역 노인일자리 서비스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 담당공무원과의 초기상담과 노인일자리 서비스연계체계 내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자를 통해 필요한 일자리지원기관(사회복지사무소,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을 소개받게 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받게 될 것이다.

2)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중앙정부부터 기초단위까지 노인일자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역할 강화다. 또한, 개별분류 작업, 취업제공, 국고와 지방비에서 전액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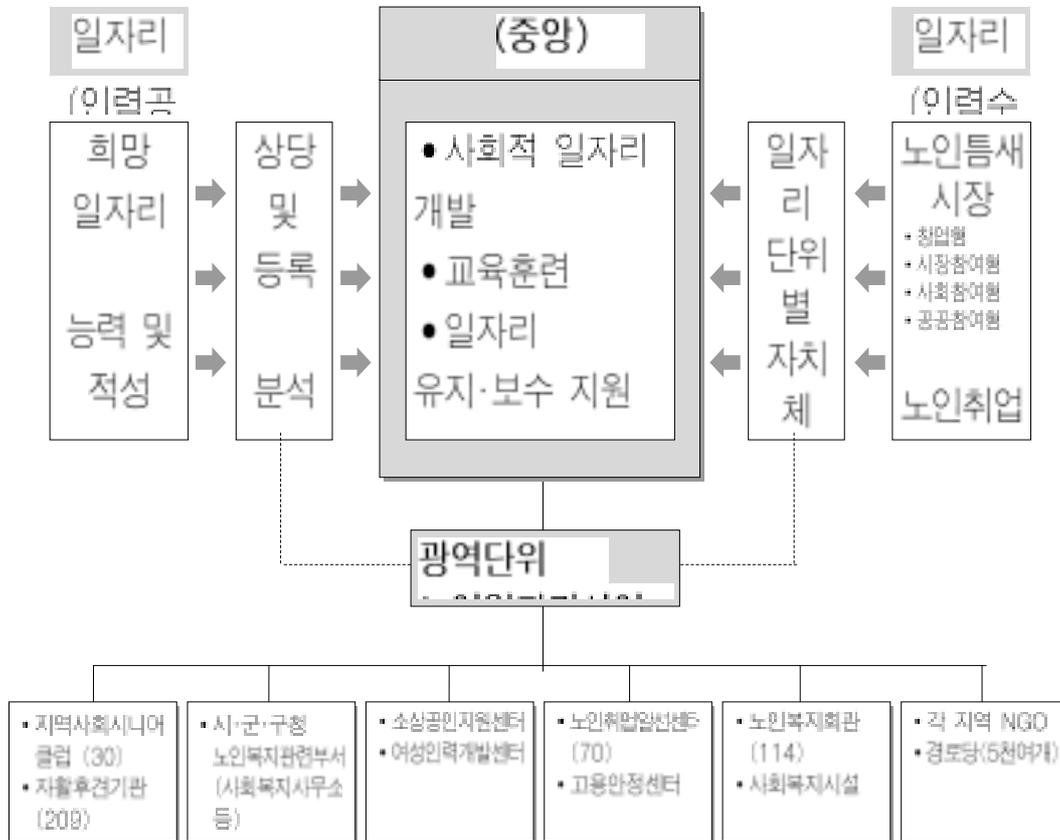


<표 V-2> 충청남도 지역사회 일자리사업수행기관의 운영 연계망(예시)



■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Network

<표 V-3>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Network



1)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조직 강화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조직을 강화조직 강화하기 위해서 다음이 요구된다. 첫째, 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과 사업 영역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중심의 직무교육, 관련지식과 이론교육 등을 통해 센터 구성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관계 유지를 위해 조직을 유연화해야 한다.

넷째, 광역 시·도에 거점 센터를 설립한다.

2)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사업역량 강화

첫째, 지속가능한 수요처 및 아이템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노인일자리종합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센터 개별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연계망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노동부 고용통합정보망(Work-net)과의 전략적 연계방안 및 독자개발 영역에 대한 검토해 볼 수 있다.

셋째, 수행기관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실무자 직무교육, 강사 풀, 교재, 교육과정 등 현장 적합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야 하고 취업 및 창업관련 정보 제공 등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인큐베이팅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전략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노인일자리의 필요성, 내용, 기대효과 등에 관한 홍보를 체계화하고 언론, 방송, 광고매체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즉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노인인력 활용의 실태 및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하고 사업모니터링, 수급동향 분석 등을 통한 정책 제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사례연구를 통해 장기적 방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3) 충청남도 지역사회 일자리사업 활성화 전략

(1) 광역 노인인력운영센터 설치(도표 21, 22참조)

시, 도 단위 지원체계 개선방안의 핵심은 중앙 노인인력운영센터와 마찬가지로 광역단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기초단위의 노인일자리 실시기관을 지원하는 광역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광역단위 노인인력운영센터의 주요 과제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일자리사업 수행을 지원하며 정보제공, 전문경영지도, 사업개발, 종사자 교육훈련 등이 될 수 있다.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보완 및 역할 강화

기초단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역할 정립과 조직 보강 등이 요구된다. 특히 자립지원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이 사업을 주로 담당할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30개 기관에 불과하고 충남에는 부여군 1곳뿐이다. 일차적으로는 충청도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기관의 설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는 사회적 일자리를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익형, 교육복지형 일자리의 경우도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의 조직과 인력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핵심 기관은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며, 이들의 역할은 일자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지역특성 및 노인의 능력,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며, 대상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제반 일자리 사업 일반을 민간 일선기관들이 수행해야 한다. 또한 검증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